

소통·통합·민생 파격 행보... 깨어나는 대한민국

사회 곳곳 변화 움직임 확산

국회·야당과 새로운 관계 노력 비정규직 제로·일자리 창출 올인 재벌·검찰·군 개혁 신히탄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라는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 한 달 사회 전반에 변화의 움직임을 확산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통합·소통 노력을 함께하면서 역대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를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84%에 달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1993년 6월과 9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기록한 83%였다.

◇국회 존중...몸 낮춘 대통령=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부터 국회의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임기 개시 직후 야당 대표들을 만나 국정운영에 협조를 당부하고 새로운 '국회·청와대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9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상춘재 앞뜰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일일이 영접하고, 김정은 여사가 손수 후식을 준비하는 등 최대한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자리 만들기 '올인'하면서 재벌 개혁=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제1호 업무지시를 내려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맡았다. 청와대 집무실에는 각종 일자리 관련 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했고, 첫 번째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자리 만들기'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있는 최우선 국정과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에 경제팀의 역량을 쏟아붓는 한편, '재벌 저격수'로 불린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각각 청와대 정책



문재인 대통령(왼쪽 세 번째)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8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최대 난제 사드 배치=문 대통령의 최대 고민거리는 대선 때부터 주요 안보 이슈로 떠오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를 재개했다. 취임 첫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다음날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차례로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미·중·일·러 4강국에 특사를 파견했으며, 4강 정상들은 모두 문 대통령의 특사를 직접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 정부에서 이뤄진 사드 배치 과정을 검증대에 올렸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이미 성주에 배치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와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할 뿐 아니라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 있음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군 인사 개혁과 전면적인 방산비리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엔 반드시 검찰개혁=문 대통령은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과 법무부 검찰국 간부 간

만전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간 사건에 대해 민정수석실에 감찰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지방으로 좌천된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돈 봉투 만찬'을 주재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면직했다. 또 법무부는 검찰 내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불렸던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전방성취처럼 단행했다. 이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의 신히탄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정부 한 달, 주요 지시 내용

- 5월10일 • 일자리위원회 설치, 운영
- 5월12일 •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 5월15일 • 미세먼지 대책,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
- 5월17일 •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 5월22일 • 4대강 일부 보 상시 개방
- 5월25일 •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대통령 특별보고 부활·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수용을 제고)
- 5월29일 • 가물대비 대책 관련, 물 부족 우려 지역 중시 관정개발 등 가물대책비 조기 집행
- 6월1일 • 8월 중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마련
- 6월5일 • 가습기 피해 문제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대책 강구

거리 시민과 셀카 찍고 참모들과 커피 산책

국민 눈높이로 내려온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한 달 행보는 국민 눈높이로 내려온 대통령으로 요약된다. 과거 권위적인 대통령 관점에서 보면 '파격'적 행보다.

문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는 취임 당일부터 화제가 됐다.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마친 뒤 차에 오르기 전 여야 지도부와 당직자는 물론 일반 시민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며 신선한 '충격'을 줬다.

관저가 정비되기 전까지 흥동 사저에서 출근할 때마다 주민의 '셀카' 요구에 일일이 응하는가 하면 청와대에 견학 온 어린이들을 보고 차에서 내려 먼저 인사를 건넨 것, 사인을 받을 노트를 가방에서 꺼내는 어린이를 가만히 기다려준 것도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됐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행사의 의견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장관 등 내빈이 대통령을 맞이했지만, 이제는 대통령과 해당 행사에서 상징성을 띤 분들이 나란히 입장한다는 내용이였다. 실제로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 대

통령의 옆자리는 4부 요인 대신 목함지뢰 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차지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관계에서도 격식을 배제했다. 취임 이튿날인 청와대에서 신임 수석 등과 오찬을 함께한 문 대통령은 테이블 앞에 앉으며 재킷을 벗자 이를 받으려는 직원에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식사를 마치고 재킷을 입지 않은 채로 한 손에는 커피 한 잔씩을 들고 참모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답소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

언론과 직접 소통하려는 모습도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신 발표자 한 달 동안 춘추관을 세 번 찾았고 그 중 한 번은 '각본 없이' 질문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낮은 자세'는 일단 호평을 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행동보다는 국정운영의 성과다"며 "정부 전체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생산성을 높여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소야대...추경·사드·정부조직법 험로 예고

복잡해진 여야 협치 방정식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한 달은 여야 협치가 국정 운영의 핵심 변수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적의원 과반에 못 미치는 120석에 불과, 야당들과의 협치 없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대치 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중간 지대에 위치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치적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대어(對與) 협력 기조는 인사 청문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더 분화하고 있다. 정의당이 개혁을 명분으로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사안별 협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당장의 현안인 추가경정예산과 사드, 정부조직법 문제뿐 아니라 향후 각종 입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 전망이 많다.

추경에 대해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한국당이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여당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

"국가재정정상 추경 편성 요건이 아니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정의당을 뺀 야당은 청와대의 사드 보고누락 진상조사 파문에 비슷한 입장을 보이며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언제까지 여론의 힘만 믿고 나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당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 없이는 제1야당으로서의 견제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처럼 물고 물리는 5당 체제에서 정국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을 통한 협치가 불가피하지만 정치적 현실은 만만치 않다. 현실적으로 여당이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고는 협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에서 여소야대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협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결국 여권은 진정성과 낮은 자세로 협치의 고차원적 정수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수경기자 tuim@kwangju.co.kr

혁명으로 완성된 대형 프리미엄 SUV

G4 REXTON 탄생

2017 인공강화 디자인상 대상 수상
2017 보험개발원 RCAR 테스트 최고 등급
2017 데일리카 디자인 어워드 대형 SUV 최우수 디자인 선정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함으로
GOOD TO GREAT

GREAT 4 Revolution

Style Revolution
역동적인 라인업과 입체감이 빛어낸 정교하고 완벽한 비율의 아름다움

High Tech Revolution
국내 SUV 최대 9.2인치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첨단사양들의 편리함

Safety Revolution
초고강력 쿼드 프레임과 Full ADAS 시스템의 치밀한 안전성

Driving Revolution
후륜구동 시스템과 4륜구동 4Tronic 조합의 완벽한 드라이빙

* 2WD 자동 7단 : 복합 10.5km/ℓ(도심주행 9.5km/ℓ, 고속도로 11.9km/ℓ) 1배기량 : 2,157cc | 공차중량 : 1,995kg | CO 2 배출량 : 186g/km | 4등급
* 4WD 자동 7단 : 복합 10.1km/ℓ(도심주행 9.2km/ℓ, 고속도로 11.5km/ℓ) 1배기량 : 2,157cc | 공차중량 : 2,095kg | CO 2 배출량 : 193g/km | 4등급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식,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 바랍니다.

구입 문의	• 광주권 : 광주중앙 529-0003	서광주 383-3434	광주광산 952-3330	광주첨단 971-0990	광주빛고을 655-4001	광주백운 233-2311	광주양산 573-8900
	• 전남권 : 순천중앙 723-7100 (061) 장흥 863-2600 완도 554-4545 여수구룡 642-1400	목포중앙 277-8000 나주 334-2727 영암 353-9500 함평 324-3800	순천 745-3666 영암 473-3456 보성 852-2892	여수 683-1800 강진 433-3100 서광양 761-8900	광주빛고을 285-7576 해남 537-3100 무안 454-0099	광양 791-0071 성성 395-0007 흥곡 835-5050	화순 371-3555 담양 383-5811 도장 542-5888